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농가 및 관련업계 보상책 분명하게 해야...

본지 김한웅 부장

한·미 FTA가 지난 4월 2일 결국 타결되고 말았다. 2006년 2월 2일 협상개시 선언 이후 정확히 14개월만의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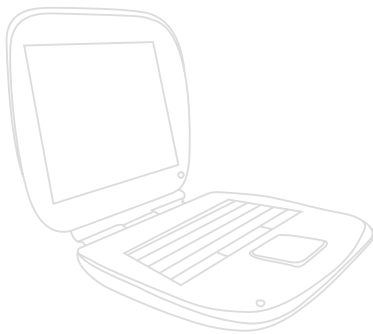
국내 농업 및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아 타결된 한·미 FTA는 과연 어느 정도의 파괴력으로 우리의 농업생산력을 무력화시킬 것인지 두렵기만 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정부 당국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촌지역 또는 농민에게 직접소득을 보전해주는 “직불금” 지원이나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정도의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여론무마용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듯 싶다.

닭고기의 경우 우선 표면적으로 나타난 협상결과는 통닭, 냉동닭고기(가슴살, 날개살)의 경우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폐지, 냉장닭고기, 냉동닭고기(다리, 기타절단육), 닭고기 가공품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협상결과가 알려지고 있다.

세부 분류별 협상결과는 최종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큰 테두리는 세워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지난 2006년 미국에서 수입된 닭고기 수입량은 3만8천



726톤으로 3천7백52만9천 달러 어치가 수입됐다.

지육평균 kg당 909원(0.97달러)으로 냉동 닭다리임을 감안하더라도 국내산 닭고기 가격 2천3백원(전년평균)과는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관세 20%마저 철폐된다면 이에 따른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전년도에 수입된 닭고기 총량은 모두 6만9천912톤으로 미국산을 제외한 닭고기 수입국은 브라질, 덴마크 등이다.

만약 관세철폐로 인해 냉동닭다리를 제외한 다른 품목까지 미국산이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대다수의 수입물량이 미국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다시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가격경쟁을 불러일으켜 국내 닭고기 시장이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높아지는 것이다.

외국산 닭고기 수입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2년도 국내 생계평균가격은 800원(한국계육협회 시세 기준)이었다. 정부가 발표한 육계평균생산비가 1천150원임을 감안할 때 연간 5억수를 생산한다고 감안해도 그 손실액은 무려 17억5천만원에 이른다. 이 수치는 단순 육계생산에 근거한 것으로 생계유통, 운반, 도계(가공), 도계육 유통 등에까지 적용하게 될 경우 그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단순히 농가들이 사육을 포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정부가 현행 키위, 포도에 대해 소득 감소분을 지원해주는 “직불금” 지원대상을 축산분야까지 확대해 적용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과연 어느 수준까지 적용될지는 의문을 갖게 한다.

축산분야는 타산업과 비교할 때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갑종농업이나 원예농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육계산업의 경우 이 같은 경우가 더욱 심한 산업 군으로 분류된다.

개체수가 작고 많기 때문에 자동화 도입에 한계가 있으며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연쇄적인 파장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1차적으로 육계생산량을 줄일 경우 농가들의 재산성 악화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사육시설 투자비 회수 요구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또한 육계 계열화 사업이 전체 산업의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열화 사업체들의 재산성 역시 극도로 악화돼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또 일부는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도계장이 무너질 경우 종사자들의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지역경제마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현실을 직시, 모든 농가들을 비롯해 관련 산업 종사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